



세종연구소

경세와 정책

1 부시 대통령 2007년도
국정연설 핵심내용 및
그 의미

송대성

부시 대통령 2007년도 국정연설 핵심내용 및 그 의미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unkang@sejong.org

4 일본의 방위성 승격과
안보정책의 변화

김성철

부시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지난 1월 24일 미국 부시대통령의 2007년도 국정연설(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이 있었다.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국정연설의 핵심내용들은 중요한 4개의 국내적인 이슈와 3개의 국제적인 이슈, 총 7개 이슈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적인 이슈들은 ▲에너지 이슈(미국의 적대국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의존하고 있는 해외석유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10년에 걸쳐 20%의 석유소모를 감축할 것임), ▲국민보건 문제(미국의 온 국민들에게 적용가능하고 (affordable), 이용가능하고 (accessible), 융통성 있게 혜택을 줄 수 있는(flexible health coverage) 새로운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지지요청), ▲교육문제(NCLB, No Child Left Behind Act: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통제, 교육기준, 결과측정 등을 모두 지역 커뮤니티에서 책임지고 실시), ▲이민 문제(부시 대통령의 포괄적인 이민정책 추진: 미국에 일시 취업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에 대한 엄격한 통제강화와 이미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 중 적개심 소지자(animosity)와 사면(amnesty)되지 않은 자 정리) 등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이슈들로서는 ▲포괄적인 테러와 전쟁 및 이라크 문제(6년째 테러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테러의 위험이 종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전은 하나의 광범위한 테러리즘과 투쟁하는 전쟁으로서 이미 요구한 21,000명의 미군을 증파해주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이기에 미군증파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국정연설의 핵심내용들은 중요한 4개의 국내적인 이슈들 즉, ▲에너지 이슈, ▲국민보건 문제, ▲교육 문제, ▲이민문제 등과 3개의 국제적인 이슈들인 ▲포괄적인 테러와 전쟁 및 이라크 문제, ▲5년에 걸쳐 미국의 육군과 해병대를 합하여 92,000 여명 미군증강요구 및 시민예비군 창설요구(Civilian Reserve Corps),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및 말라리아 박멸을 위한 부시대통령의 비상계획 지원 등이다.

에 협조를 부탁함), ▲5년에 걸쳐 미국의 육군과 해병대를 합하여 92,000 여명 미군증강 요구 및 시민예비군 창설 요구(Civilian Reserve Corps),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및 말라리아 박멸을 위한 부시대통령의 비상계획 지원 요청 등이다.

국정연설의 의미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중요한 의미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부시행정부의 지상지

7 아세안+3 필리핀
정상회의

김기수

10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이상목

고의 관심사항은 오직 이라크전의 성공적인 마무리 및 중동에서 미국정책의 성공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정연설의 분량 총12쪽(CNN 인터넷보도 분량) 중 무려 5쪽 반을 이라크 문제 및 테러와의 전쟁언급에 할애하고 있을 정도로 주된 관심을 이라크 문제 및 테러와 전쟁문제에 담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미국이 중동과 이라크에서 성공을 거두고 미국인들을 이러한 위협에서 구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의 성공을 위해 올인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지상지고의 관심사항은 미국이 중동 및 이라크에서 성공적인 정책을 달성하는 일이며, 이라크전에서 성공을 위해 2만여명의 미군을 증파하여 이라크 정부를 도와 주는 것이 부시행정부의 새로운 이라크전에 대한 전쟁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전 및 중동정책의 성공을 위해 올인하고 있지만 그 성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직 “이라크인들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이라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2만 여명의 미군들을 증파하여 이라크 정부를 도와주어 법치주의, 인권존중, 안전 확보를 보장하는 이라크에서 민주정부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이미 발표된 내용을 되풀이 하였다. 이라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 없이 그저 미군 2만여명 증파만을 주장하는 부시대통령의 새로운 전쟁계획은 국정연설이후 하루만인 1월 24일 미국의 상원외교위원회(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에서 12-9로 부결되었다. 국정연설을 통하여 부시대통령은 새로운 이라크 전쟁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의회 및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향후 많은 혼미를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부시 대통령이 집권 1, 2기를 통하여 가장 강력한 신념을 표명하면서 과히 저돌적으로 추진하여왔던 역사적인 과업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그러한 부시대통령의 강력하였던 신념과 저돌적인 추진력이 금번 국정연설에서는 대단한 약화 내지 실종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의 백악관은 지난 해 3월 16일 발표한 ‘미국

국가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 고양을 위해 폭정종식과 민주주의 확산 노력을 영원한 역사적 진리로 간주하고 향후에도 끈질기게 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테러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 치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종교전쟁이 아닌 ‘무장력과 전쟁(a battle of arms)’이요, ‘이상의 차이에서 오는 전쟁(a battle of ideas)’이다. 미국은 테러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1)예방차원에서 테러리스트 공격, (2)테러리스트와 불량국가들 간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차단, (3)불량국가들의 테러리스트 그룹 지원 차단, (4)테러리스트들의 특정국가 기지사용 차단 등이 다”라는 강력한 신념과 구체적인 정책들을 표명하면서 테러와 전쟁에 임할 것을 천명하였었다. 그러나 금번 국정연설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신념과 박력 있는 추진계획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금번 국정연설에서 표명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임하는 구체적인 계획 중 하나는 양당의 의회 중진의원들로 의회 내에 「테러와 전쟁에 대한 특별자문위원회(A Special Advisory Council on the War on Terror)」를 구성하여 부시 행정부가 치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제의는 종전의 부시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에 임하던 자세와는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자신감을 상실하고 상하양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함께 하면서 책임을 함께 나누어 갖자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금년도 국정연설 내용 중에는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여된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상당수 있어 향후 많은 논란들이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은 향후 5년 내에 육군과 해병대를 합쳐 총 92,000여명의 군대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병력이 어디에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언급 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내용들은 국민보건문제(health care)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국민들에게 적용가능하고, 이용가능하고, 융통성 있는 보험제도 제의’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

다. 펜실바니아 민주당 의원 존 몰타트(John Murthat)는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많은 애매함 투성이다. 국민보건을 위한 보험제도 제안은 또 다른 하나의 잘못되고 애매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넷째, 우리 한국인들이 많은 궁금증과 기대를 갖고 있었던 북핵문제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단 한문장의 내용은 “중국, 일본, 러시아 및 한국 등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집중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Together with our partners in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we are pursuing intensive diplomacy to achieve a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로 되어 있다.

한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 금번 국정연설에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및 한국 등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집중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란 짤막한 단 한 문장에 담고 있다.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짤막한 한 문장의 언급은 그 동안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악의 축(axis of evil)’, ‘불량국가(rogue state)’, ‘범죄국가(criminal state)’, ‘가장 위험스러운 국가(the most dangerous country)’ 등 강경 어조로 비판하여 왔던 태도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지난 해 3월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미국의 부시행 정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세계적인 비핵화 노력에 가장 큰 도전과 위배를 거듭하고 있는 불량국가로서 ‘표리부동함과 나쁜 신념을 갖고 교섭을 전개한 오래고 황량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It presents a long and bleak record of duplicity and bad-faith negotiations.)’이라고 비판하였었다.

금번 국정연설 속에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강한 압박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특이한 사실 중 하나다. 이와 같이 미국의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언급회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그 동안 북한의 김계관과 미국의 힐 사이에 접촉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총괄적으로 만족하는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타협이 곧 개최될 6자회담에서 가시화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과, 둘째,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라크 문제에 비해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더 이상 깊게 개입하고 싶지 않는 상태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설득력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번 국정연설 내용 중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의 중요 국정과제들 중 미언급 분야가 상당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지구촌 온난화 문제 등 심각한 많은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안 했음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금번 부시행정부의 국정발표와 관련 우리가 유념할 사항은 첫째, 현재의 부시행 정부는 상하양원의 주도권을 민주당에게 빼앗긴 이후 국정전반에 걸쳐 강한 의욕과 자신감이 약화된 행정부로 변모되어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만 한다. 특히 미국인들의 부시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 저하는 더욱 부시 행정부의 자신감을

부시행정부의 국정발표와 관련 우리가 유념할 사항은 첫째, 현재의 부시행 정부는 국정전반에 걸쳐 강한 의욕과 자신감이 약화된 행정부로 변모되어있다는 점, 둘째,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향후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북핵폐기문제도 미국 부시행정부의 북핵폐기를 위한 신념 약화로 인해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상실케 한 것 같고, 이러한 자신감 상실 속에서 남은 집권기간 동안 무능정부 내지 약체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과 동시 레임덕 현상도 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향후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북핵폐기 문제도 미국 부시행정부의 북핵폐기를 위한 신념 약화로 인해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방위성 승격과 안보정책의 변화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soug@sejong.org

일본의 방위성 승격

2007년 1월 9일 일본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했다. 방위청이 발족한 195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은 정식 각료인 초대 방위상(대신)에 취임했다. 전후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있던 방위청이 성(省)으로 승격되면 내각부 대신인 총리를 거치지 않고 방위상이 직접 중요 안전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이라크에 대한 인도주의적 복구지원활동 등 자위대의 해외활동도 종전의 부수적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격상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기념사에서 전후체제의 고정관념과 결별하고 21세기에 맞는 일본의 새로운 모습과 이상을 추구할 때라고 하면서, 방위성 승격은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커다란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의 전후시대를 총정리하고 새로운 정상적인 보통국가의 탄생을 의미한다.

방위성 승격 후에도 문민통치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자위대의 최고사령관으로서 방위출동과 치안출동의 명령권은 총리가 가진다.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은 1964년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정권이 승격을 각의에서 결정하고도 법안의 통과에 실패한 적이 있고, 2002년에도 승격을 추진하다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소극적 자세로 법안 제출이 미뤄져 왔다. 2006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일본 내에 위기감이 조성된 것을 배경으로, 자민당 주도로 6월에 성 승격법안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고, 12월에 성 승격법이 성립되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기념사에서 전후체제의 고정관념과 결별하고 21세기에 맞는 일본의 새

로운 모습과 이상을 추구할 때라고 하면서, 방위성 승격은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커다란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의 전후시대를 총정리하고 새로운 정상적인 보통국가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헌법개정과 군사력 증강, 경제회생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와 과제

방위성의 출범으로 인한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자위대는 방위성 승격에 따라 종전의 전수(專守)방위를 넘어서 해외파견이 늘어나고,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해외파병을 위한 자위대파견항구법을 추진하고 해외파견 전문부대를 창설하고,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도입 등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현행 헌법의 해석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수방위와 비핵 3원칙을 수정할 수 있고,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를 통한 군사 일체화를 추구하고, 헌법 9조를 개정하여 정식 군대

자위대는 방위성 승격에 따라 종전의 전수(專守)방위를 넘어서 해외파견이 늘어나고,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해외파병을 위한 자위대파견항구법을 추진하고 해외파견 전문부대를 창설하고,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도입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현행 헌법의 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

를 보유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에는 해외파견 임무를 전문으로 하는 방위상 직할의 중앙즉응집단(병력 3,000명 규모)과 해외파견 근무경험이 있는 자위대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활동협력대가 창설된다. 주일미군의 재편을 통한 미일 군사동맹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아베 수상과 규마 방위상은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에 큰 변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전수방위와 비핵3원칙, 문민통제의 원칙은 견지된다고 했다. 해외에서의 자위대 활동이 종래의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되어, 그에 따른 방위성의 개혁과 자위대의 재편이 조속히 실행될 전망이다.

방위성은 2007년 육상자위대에 중앙즉응집단을 신설하고, 약 700명의 중앙즉응연대를 해외활동의 선도부대로 파견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중앙즉응집단은 인원 약 3,200명으로 사령부는 아사카(朝霞) 주둔지에 둔다. 국내에서 테러와 게릴라공격에 신속히 대응하는 정예 제1공정(空挺)단과 생물화학병기의 테러에 대처하는 제101특수무기방호대를 설치한다. 국제활동교육대 등의 전문부대를 집약해서 해외 파견의 사령탑 역할을 한다. 중앙즉응연대는 국내 정치경제 중추를 방호하고 테러와 대규모재해의 경우 증원부대가 되는 한편, 해외파견의 선도부대가 되고 상설 해외대기부대가 된다.

2007년 9월에는 방위성 내에 미일방위협력과를 신설하고, 미일안보체제의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의 재편과 미사일방어(MD)체제의 수립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미·일 간에는 군사일체화가 진전되고, 대미교섭의 창구 역할을 해 온 외무성과 방위성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외무성과는 별도의 루트를 통해 방위성 독자의 정책조정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직접 교섭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자위대의 본래 임무로 격상된 해외활동을 위해서는 외국의 치안경비기관과 주민으로부터의 정보수집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육상자위대는 2007년 이라크를 중심으로 파견지에서의 협력자 확보와 정보수집을 임무로 하는 약 50명의 현지정보대를 신설한다.

방위성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는 2007년초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의 개최를 준비하고, 2월에 미군재편추진특별조치법안을 통상국회에 제출하고, 3월에 오키나와현 중남부의 미군시설반환에 관한 상세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며, 7월에 이라크 부흥지원특별조치법의 연장문제가 대두되고, 9월에 방위시설청의 폐지통합 등의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규마 방위상은 '정책관청'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방위성의 정책입안 기능을 강화해서 중장기적인

안전보장정책의 기획입안을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방위성이 독자성을 발휘하게 되면, 미일관계를 담당하는 외무성과 일본형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창설을 검토하고 있는 수상관저와의 사이에 역할분담 및 의견조정과 관련해서 마찰이 표면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또한, 방위성은 방위관료와 자위관의 인재육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일본의 안보정책기구의 신설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관저기능강화회의'(의장: 아베 수상)에서 검토하고 있는 일본형 NSC의 개요가 결정되었다. 동 회의는 외교 및 안전보장의 장기적 전략의 책정, 유사사태와 대규모 재해 등의 긴급사태에의 대응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수상을 의장으로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을 중심으로 하는 각료회의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NSC를 본따서 만드는 조직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위대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해서 종래 헌법해석을 변경해 본인에게 위협이 없는 경우에도 임무수행에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기사용을 용인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정전감시 등 국제연합평화유지대(PKF) 본체업무에 참가하는데 필요하다고 한다. 무기사용의 대상은 범죄집단 등으로 국가의 정규군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일본정부는 2007년내 해석변경을 표명하고, PKO협력법 등 관련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1954년 방위청이 발족하고, 처음으로 자위대가 해외파견된 것이 1991년 걸프전쟁 때 페르시아만에 소해정(掃海艇)을 파견한 것이다. 그 후 자위대는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PKO) 등의 해외업무에 참가해 왔다. 2006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이 있어 일본에게 안보정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2007년 중장기적 시점에서 안보정책을 검토하는 전략기획실을 방위정책국 방위정책과 내에 신설하고, 방위연구소와 연계해서 '역지'의 방법, 국제평화협력활동, 방위교류 등의 테마로 방위정책을 검토하려고 한다. 2006년 10월 발족한 전략검토팀은 방위청, 통합막료감부, 육해공 3자위대의 과장급을 중심으로, 2005년 2월 미·일 양국정부가 합의한 공통전략목표를 토대로 대북한, 중

국정책 등 방위전략을 마련한다. 2007년 3월 결론이 나오면 신설되는 전략기획실에 작업을 넘길 예정이다.

방위성 승격의 함의와 전망

일본의 방위성 승격은 일본이 정상적인 군사국가 혹은 보통의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의 평화이미지를 벗고 국제적·군사적으로 적극적 활동을 하는 새로운 일본이 탄생하는 것이다. 전후 총결산을 통해 명치유신과 태평양전쟁에 이어 제3의 개국(開國)을 준비해 온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외교대국이 되려고 하고, 이는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과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며, 안보정책의 변화의 필요에 따라 헌법해석을 변경한다.

일본의 방위성 승격은 일본이 정상적인 군사국가 혹은 보통의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의 평화이미지를 벗고 국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적극 활동을 하는 새로운 일본이 탄생하는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북한의 핵무장 등 동북아 안보환경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해서, 이에 대처하는 것이 사활을 건 문제라고 한다. 방위청의 성으로의 승격에는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의 다수가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 세력이 일본의 안보외교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고 헌법개정을 주도하는 정치가 그룹이다.

일본의 방위체제는 요원과 전차를 북해도에 중점 배치하는 등 냉전구조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일본은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제테러, 미사일 등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서 안보체제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일동맹의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의 재편을 착실히 수행하고, 일본유사와 주변사태를 상정한 공동작전계획을 정비하려고 한다.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배치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이 2007년 7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2007년 11월에 기한이 끝난다. 때마다 시한입법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항구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일본정부의

헌법해석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문제도 주요과제다.

세종연구소 신간안내

세종정책총서

1. 『한반도 평화안보론』, 백종천(저)
2. 『세계화와 탈산업화 시대의 노동과 복지의 정치』, 강명세(저)
3.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박기덕(저)
4.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정치·사회』, 박기덕(편)
5.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대북·통일』, 정성장(편)
6.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동북아 경제협력』, 김성철(편)
7.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동북아 안보협력』, 이태환(편)
8.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외교·안보』, 이상현(편)
9. 『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 연구』, 양운철(저)
10. 『한반도 평화확보: 경험, 방안, 그리고 선택』, 송대성(저)
11. 『러시아 국가와 사회: 새질서의 모색』, 정한구(저)
12. 『동아시아 역학구도』, 김기수(저)
13. 『한국의 국가전략: 전략환경과 선택』, 백종천(편)
14. 『신 세계질서와 동북아 안보』, 이상현(편)
15.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이해: 고르바초프에서 푸틴까지』, 정은숙(저)
16.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정성장·백학순(공저)
17. 『한·미동맹 50년: 분석과 정책』, 백종천(편)
18.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송대성(편)
19. 『경제위기와 복지의 정치』, 이숙중(편)
20. 『미중일관계와 동북아질서』, 김성철(편)
21. 『남북화해시대의 주한미군』, 홍현익, 송대성, 이상현(공저)
22. 『정치 엘리트 연구, 2002: 중국,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면우(편)
23.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를 중심으로』, 이태환(편)

아세안+3 필리핀 정상회의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kskim@sejong.org

얼마 전 1월 중순, 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 삼국의 정례 회의가 필리핀에서 열렸다. 이른바 아세안+3로 불리는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회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눈에 띄는 합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한중일 삼국이 상호간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협정 공식협상을 오는 3월 일본의 동경에서 개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국제적 회합의 지지부진에 익숙해졌다. APEC도 별 뚜렷한 성과 없는 회의로 인식된 지 오래 이고, ASEM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바 없다. 이제는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장기적인 외교 안목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것이 눈에 띈 뿐이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국제적 회합의 지지부진에 익숙해졌다. APEC도 별 뚜렷한 성과 없는 회의로 인식된 지 오래 이고, ASEM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바 없다. 이제는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장기적인 외교 안목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SEAN+3의 배경

우선 다자간 국제회의, 즉 여러 회원국이 모이는 회의는 성격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많은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를 하나로 묶는 것 자체가 보통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는 아무리 다자간 회합이라도 강력한 리더십, 즉 그 회의에 자국의 이해가 깊게 드리워져 있는 강대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회의의 성공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이유야 어떠하든 여러 국가들이 모인다는 것은 당시 국제환경이 그것을 강요한 측면이 있음으로 특정 회의를 둘러싼 국제정세 또한 회합의 효용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모든 변수를 종합해 보면 아세안+3 회의의 현 주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3는 지난 1997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체인 ASEAN이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최강국인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출발된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다자회의체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회의의 모체가 ASEAN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동아시아 3대 강국 중 어느 누구도 동아시아만의 회의체를 위해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 무슨 이유로 지역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회합체가 출범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 배경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서유럽의 시장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다른 지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미지역은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토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추진 중이었고,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목격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990년 2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 수상이 제안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EAEC)였다. 그러나 동아시아만의 지역주의 움직임은 이곳에 방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미국의 주도 하에 태평양 전체를 포괄하는 APEC이라는 더 큰 지역협력체에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흡수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1997년 시작된 ASEAN+3 회의가 외형적으로는 과거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부활처럼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ASEAN 국가들이 한중일 삼국을 초대하여 회의를 여는 형식 취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자극적인 모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또한 1997년 동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를 토의 및 극복하기 위한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었으므로 회합의 당위성도 당시로서는 충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후 동아시아만의

움직임이 가시적인 탄력을 받은 적은 없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짚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역외 국제환경에서 찾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역내 역학구도에서 발견된다.

주변 환경과 역내 역학구도

우선 과거의 예로 볼 때 미국의 동의 없이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진척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논리적으로 논의의 진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아시아통화기금(AMF)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 9월 ASEM 재무장관 회의 중 미화 1,000억 달러를 출범 기금으로 하는 아시아통화기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도 미국의 반대로 일은 성사될 수 없었다. 미국의 이해는 간단했는데, 동아시아의 통화 지역주의가 발흥하는 경우 미국의 세계통화패권에 금이 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사실을 배경으로 같은 해 ASEAN+3 첫 회의가 열렸다는 점은 그 자체로 회합이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과거의 예로 볼 때 미국의 동의 없이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진척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논리적으로 논의의 진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역내 역학구도 또한 동아시아만의 움직임이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아시아통화기금이 제안될 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사실상 역내 움직임의 주체였다. 그러나 미국의 이해와 상충될 때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이니셔티브는 아시아통화기금이 마지막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가시화되자, 일본과 중국은 국제관계의 기본 원리 상 상호 견제가 불가피한 경쟁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관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협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단합된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 전개

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움직임은 사실상 분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교섭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지만, 한국과 일본 간에 자유무역협정 실무 교섭이 있었고, 미국 역시 한국에 접근, 동아시아 최초의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착실히 추진하여 작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해 같은 협정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과 중국은 국제관계의 기본 원리 상 서로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경쟁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관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협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단합된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 전개되었던 셈이다.

ASEAN+3의 의의

그렇다면 ASEAN+3와 같은 지역 협의체의 의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역내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역외 장애요인의 상존이라는 문제가 있으나, 회합이 정기적으로 지속되었고 그 연한 또한 10년을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주의라는 큰 파고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무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경제 협력을 통해 역내 국가들이 다양한 경제적 이해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지역주의의 최소한 기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2000년 5월 ASEAN+3 재무장관 회의의 결정은 그러한 이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역내 외환위기의 발발 시 회원국들이 외환을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그 후 많은 통화스왑협정이 실제로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걸림돌로 간주되고 있는 상기의 조건들이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중국과의 관계를 향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동아시아 경제 및 외교정책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역으로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 어떤 새로운 입장을 취하

느냐에 따라서도 역내 움직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동안 가장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어 왔던 일본의 이니셔티브도 상기의 변화로 인해 향후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지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주요 변수는 ASEAN+3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잠복 상태의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ASEAN+3는 현실에 맞게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회합이 정기적으로 지속되었고 그 연한 또한 10년을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주의라는 큰 파고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무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력을 통해 역내 국가들이 다양한 경제적 이해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지역주의의 최소한 기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역학구도 상 ASEAN+3의 미래는 아무래도 역내 최강국인 한중일 삼국의 이해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는 역으로 삼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에 ASEAN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금번 회의에서 한중일 삼국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협정의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갖도록 한 것이나 3국 외무장관회의를 1년에 한번 정례화 한 것 등은 주어진 조건에서 삼국의 이해를 조정하려는 중요한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삼국은 지정학 혹은 지경학적으로 뿔뿔이 떨어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이해 혹은 외부의 압력이 어떠한 상호협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ASEAN+3를 통한 삼국 간의 대화 확대는 ASEAN+3의 존재 가치를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APEC에서 같이 느긋한 마음으로 ASEAN+3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꿰뚫어 보며 국제정세와 역내의 다이나믹스를 유연하게 조화시키는 장기 외교전략을 구사하면 족한 것이다.

세종연구소 신간안내

세계화와 탈산업화 시대의 노동과 복지의 정치

강명세 저

노동과 복지는 선진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으로 민주주의의 남매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은 노동과 복지의 요구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이 주로 개도국적 관점에서 치중되어 왔다면 이 책은 선진민주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탐구하는 자 노력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역전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한국은 개도국의 시각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다.

책제목의 머리로 사용한 세계화와 탈산업화는 20세기 후반 이후 지구 전체의 키워드이다. 이 두 가지 변화는 그 밖의 다른 현상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마스터 변수(master variables)이다. 그리고 제목의 끝을 차지하는 노동과 복지는 가장 국내적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이 책은 세계화와 탈산업화가 노동과 복지 각각에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주는 영향을 밝히고자 했다. 책은 총 3부 10장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 곳곳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화와 탈산업화 현상이 노동과 복지에 주는 결과를 분석한다. 특히 제4장은 비교적 시각에서 세계화와 탈산업화의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통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어느 정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부의 주제는 사회협약의 정치이다. 본래 노사정 혹은 사회협약은 서유럽 선진민주주의 체제에서 흔히 나타나며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탈산업화의 압력으로 또 다시 크게 부활하고 있다. 저자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개발된 협약에 관한 이론들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한국에서의 사회협약을 판단할 준거틀을 제공한다.

제3부의 주제는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복지국가 문제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국가는 가장 주요한 사회 정책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선진 복지국가와는 반대로 한국은 이제 막 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3부는 한국복지국가의 기원, 과정 및 발전문제에 대한 글들이 큰 줄기를 이룬다. 3부는 정치학 분야에서의 복지연구의 '저발전'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나아가 복지연구의 학제간 불균형을 극복함으로써 선진국과의 연구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이상목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smlee@kndu.ac.kr

병역에 관련된 사항이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관심의 하나임이 최근의 복무기간단축에 대한 논의로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다. 병역에 관련된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과거에도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 판결, 대선·총선 후보자 및 고위공직자의 병역공개, 병역비리사건 보도 및 양심적·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 논쟁 등의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왔다. 이러한 형평성 논란은 출산기피, 초혼연령상승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였으나 인력수급 면에서 잉여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징집제 및 대체복무제도의 운영이 불가피한 현실에 비추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징병제도는 인간의 자발성과 동기유발, 고도산업사회의 분업원칙에 기초한 모병제도와는 달리 민주사회에서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에 상응하는 급부로서 병역을 인식하며,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되는 강제성과 낮은 보수를 특징으로 한다. 안보

병역대상자의 일정부분만 징집되는 우리의 현실(부분징집제)에서는 국가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문제는 물론이고 병역의 형평성 문제도 동시에 야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특히 학력중심의 선병은 국가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문제를 심화시켜왔다.

논리에 기초한 전면징집제의 시행이 전체 해당인력의 강제동원으로 인해 타 분야에서의 활용을 금지함에 따라 비록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야기하나 병역부담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병역대상자의 일정부분만 징집되는 우리의 현실(부분징집제)에서는 국가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문제는 물론이고 병역의 형평성 문제도 동시에 야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특히 학

력중심의 선병은 국가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문제를 심화시켜왔다.

한편, 징병제도 채택과 유지의 논리로써 흔히 징집인력에 대한 낮은 보수로 국방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이 지적은 가시적 비용만을 고려한 주장이며 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은 간과하고 있다. 즉, 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은

군인력의 과잉현상은 현대전의 핵심요소인 방산기술의 발전과 현대화를 지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또한 민간기업 등이 각 개인의 능력(생산성)에 기초해 해당인력을 적소에 투입하는 것과는 달리 징집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배치해야 할 동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인력활용의 낭비성과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병역을 담당하는 인력이 군복무기간 동안 민간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에 지급되는 보수와 국가에서 책정한 낮은 보수의 차액을 묵시적 과세(implicit tax) 또는 현물세(natural tax)의 형태로 국가에 납부한 것과 일치하고, 징집인력 개인에게는 이면적 기회비용(hidden opportunity costs)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제시된 남성의 학력별·연령계층별·근속년수별 급여를 기초로 우리나라 징집병사인력의 기회비용(현물세)을 도출한 결과 이미 2002년에 연간 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이 7조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용측면에서 가지는 단점 이외에도 현역병의 낮은 보수와 값비싼 무기 사이에서는 전투력 생성에 필요한 투입요소의 상대가격이 왜곡됨에 따라 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증강보다는 인력확보를 추구하는 인력의 과잉현상(military overmanning)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다. 따라서 군인력의 과잉현상은 현대전의 핵심요소인 방산기술의 발전과 현대

화를 지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또한 민간기업들이 각 개인의 능력(생산성)에 기초해 해당인력을 적소에 투입하는 것과는 달리 징집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배치해야 할 동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인력 활용의 낭비성과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역군복무 기피사유에 대한 병사들의 의식

현역복무에 대한 병사들의 의식과 현역복무 기피사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 국가안보를 위한 군복무의 당위성과 개인의 병역부담 및 기회비용이라는 두 관점에서 갈등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역복무 기피사유는 자기발전(학업, 생업)의 지장, 통제된 생활, 고된 훈련, 복무기간 과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제된 생활과 자기발전지장을 복무기간 과다로 인한 병역기피사유에 포함시키면 응답자의 약 80%가 복무기간 과다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복무기간의 조정은 절실하고, 특히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 병역면제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병역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사회와의 단절과 폐쇄로 인한 장래의 불안감은 자신의 관심을 해결하기 위한 병영생활 환경의 부족에 대한 지적으로 연결되고 있고, 셋째 개방성, 공정성, 합리성, 청결성 면에서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악습이 현역복무를 기피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시사점에서 병영생활개선과 군의 이미지 개선, 그리고 악습퇴치를 위한 노력은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과 인권담당관 직위 신설, 외출·외박제도 및 병영시설의 개선 등을 최근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의 일환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요인들은 현역복무에 대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상쇄시키거나 보완하기에는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현역복무 기피 방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복무기간단축과 현역복무 이행자의 제대 후 수혜방안을 조명해 나가야 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지면상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기로 한다.

복무기간의 결정요인과 조정가능성

우리나라는 건군이래로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단

축 조정해 왔는데 그 변천내역을 보면 1955년 이후로 10차례에 걸쳐 복무기간을 조정하였으며, 현재 육군은 24개월, 해군과 공군은 각각 26개월과 27개월의 복무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복무기간단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한 60여 개 국가 중 여전히 세계 6~7위의 긴 복무기간을 설정한 국가이다. 예를 들어 서구지역국가에는 키프로스가 26개월, 동구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아르메니아가 18~24개월로 가장 긴 복무기간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이 5~10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한국이 24~27개월, 베트남, 싱가포르가 24~36개월로 비교적 긴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가, 중남미 지역에서는 과테말라와 베네수엘라가 각각 30개월로 이 지역에서 가장 긴 의무복무기간을 보이고 있다.

복무기간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력의 수급상황으로 인구변동에 의한 남성출생인구의 공급과 안보위협정도를 고려하여 추구하는 군구조와 그로 인한 총병사의 수요이다. 또한, 이러한 인력의 수급격차는 잉여인력으로 대체복무인력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에 따라 남성출생인구가 감소하는 등의 현재의 인구추이에서는 군구조를 자본집약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연간 소요인력을 축소하는 하는 한편, 대체복무인력을 감소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을 가능케 해야 한다.

복무기간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력의 수급상황으로 인구변동에 의한 남성출생인구의 공급과 안보위협정도를 고려하여 추구하는 군구조와 그로 인한 총병사의 수요이다.

향후의 병력규모와 대체복무인력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조정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시나리오별로 복무기간조정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의 복무기간조정가능성이다. 국방개혁안에 의하면 2020년까지 병사의 규모를 54만 여명에서 30만 명으로 감축하되 2004년부터 실시하여 2008년을 목표로 4만 명의 감축을 이미 시

행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병력감축은 연도별로 동일한 규모로 감축하는 경우이다. 또한 현역성·비현역성 대체복무인력을 출산감소와 현역소요의 원활한 충족을 고려하여 총 7-9만 여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각 년도 별로 차이는 있으나 인력의 과부족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잉여인력이 가장 적은 해가 2006년도였으나 2007년 이후에는 잉여인력이 발생함으로 해서 복무기간단축이 가능해 진다. 복무기간단축의 폭이 클수록 연간소요인력이 증가하여 복무기간단축연도가 뒤로 연기되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1992년생이 입영하는 2011년에는 대폭적인 복무기간단축이 가능하고 이러한 단축은 2020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국방개혁에 의해 인력소요가 감소하더라도 그 인력감소분을 각 년도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즉, 병력감축을 조기에 실현할수록 복무기간단축의 가능성은 앞당겨지고 반대로 병력수의 감축을 뒤로 연기할수록 그 복무기간단축의 시기는 연기된다.

숙련병 소요에 의한 복무기간단축 반대논리

복무기간의 단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 단축이 병사의 전투력 숙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복무기간단축이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병사의 복무기간이 숙련에 필요한 기간과 이러한 숙련병이 조직 내에 상존해야 할 숙련병 구성비에 의해 결정되므로 복무기간단축을 위한 인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적으로 숙련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긍정적인 사실은 병사의 70~80%가 대재·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기간단축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도를 높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력수급요인이 갖추어 지더라도 앞의 두 요인에 의해 제한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보병과 같이 병사의 숙련에 필요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병과(예를 들면 보병, 수송, 포병)의 병사들이 전체인력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데

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병과에 적합한 복무기간 보다 길게 복무함에 따라 개인에게는 소득 및 학업의 기회비용이 발생되고 국가적으로는 가용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체병사들의 복무기간은 기갑, 병참, 병기 등의 특수병과를 중심으로 설정될 것이 아니라 다수를 차지하는 병과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오랜 숙련기간이 필요로 하는 특수병과에는 유급지원병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적으로 숙련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긍정적인 사실은 병사의 70~80%가 대재·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기간단축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도를 높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정책적 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쟁은 그 시발점이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는 병역기피 풍조에서이다. 따라서 군을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과업으로 인식될 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쟁은 그 시발점이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는 병역기피 풍조에서이다. 따라서 군을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과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배가되고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있도록 모든 노력이 배가되고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복무기간 단축은 역설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선진한국 건설에 필요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남성개인에게는 병역부담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선거용 전략으로 폄하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군 이후 지속적인 복무기간단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병제를 채택한 60여 개 국가 중 여전히 세계 6~7위의 긴 복무기간을 설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편, 병역의무의 형평을 제고하고 징집대상자에게 현역복무에 대한 선호체계를 확립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복무형태별로 차등화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정책수단으로 설정하고, 부차적으로는 병역의무의 해제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역의무 이행자에 의해 제공되는 국가방위 및 안전보장의 수혜를 입는 병역의무 대상자에게는 국가봉사차원에서 군역형평조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여성에게 있어서 과거에는 육체적·정신

적 능력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병역의무가 해제되어 왔으나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심지어 군대에서도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어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부재보다는 사회적·문화 정책적 배려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여성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복무기간단축과 관련해 여성인력의 활용은 현행제도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단축에 커다란 활력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세종연구소 신간안내

한반도 평화안보론

백종천 저

이 책에서는 냉전적 시각을 넘어서 ‘평화안보’ 개념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 대결에서 협력으로, 체제안보에서 공동안보로, 민족과 외세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민족과 세계의 공존적 사고로 전환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한국 국가안보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박기덕 저

이 책은 한국 민주화 이후 18년이 경과한 현재 절차적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불만이나 회의론이 제기되고, 또 이 문제의 해결방식으로 개혁론이 정권에 관계없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검토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제1부는 한국 권위주의체제가 민주화된 과정을 분석하였다. 제2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공고화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여, 그를 바탕으로 초기 두 정부의 개혁을 거치면서 한국의 새 민주주의체제가 실질적 면모를 갖추어 공고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제3부는 공고화 과정을 거치는 중 경제위기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과를 경험적으로 설명하였다.

제4부는 이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정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사회체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런 이상주의적 민주주의관이라는 환상이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과 실망을 배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다수의 심의에 의한 결론이 소수에 의한 결정보다 우월할 것이라는 가정 위에 이를 원활하게 하는 과정이고 절차이며, 그 결과는 사전에 확정되지도 보장되지도 않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 공고화되었다고 간주된다...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정치·사회

박기덕 편

한국은 1987년 이후 상당한 정치·사회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제사회에서 성공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15년 동안 우리의 국내 정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들을 규명, 앞으로의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정치사회질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는 2020년 한국이 ‘선진평화강국’의 지위와 남북간 공존공영의 관계를 확립했다는 전제 아래, 정치제도, 정당과 시민사회, 사회적 갈등의 평화적 관리, 교육 및 인적자원, 복지 그리고 문화라는 여섯 가지 분야에서 성취해야 할 각각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연구소 학술지 안내

『국가전략』 제12권 4호 | 2006년 겨울

- 목 차 -

논문

세계금융 중심도시 네트워크의 국제정치경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계획』 비판	이 왕 휘
미국 부시행정부의 변환외교: 정보화시대 제국적 지식외교의 등장	전 재 성
클린턴 전통의 재평가: 정책 영역과 대통령의 성공	정 하 용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수직적 인식을 넘어서 수평적 인식으로의 발전전망	고 성 빈
분단현상유지에 대한 저항인가, 순응인가?: 전후 냉전질서의 형성과 베를린 선언	권 오 중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윤 성 이
조세정책의 정치적 고려: 현직 효과 vs 이념 효과	김 재 한

서평

‘불량정권’ 다루기: 포용인가 제재인가?	이 상 현
미국 정치의 우경화	강 명 세
신간 안내	이 면 우

회원제 안내

세종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회원제를 실시하여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방법】

- 연구소 홈페이지(www.sejong.org)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연간 회원자격이 취득됩니다.
- 연회비 : 일반회원 : 50,000원(1년), 120,000원(3년)
학생회원 : 30,000원(1년), 70,000원(3년)
기관회원 : 150,000원(1년), 360,000원(3년)
개인평생회원 : 1,000,000원
단체평생회원 : 3,000,000원

【회원권리】

연구소 주최 연구행사 초청 / 연구소발행 출판물 무료 제공 /
기존 출간도서 구입시 20% 할인

【회원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주 소 : 463-600 경기도 성남시 분당우체국 사서함 45호
| 세종연구소 교육홍보팀 |
연락처 : Tel. 031-750-7611 / Fax. 031-723-8800
e-mail: public@sejong.org

정세와 정책 | 2007년 2월 1일

발행인 | 박기덕 편집인 | 이상현 편집기획위원 | 이태환, 정은숙, 진창수, 정성장
편집간사 | 정성일 발행처 | 세종연구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우체국 사서함 45호 (463-600)
전화 | (031)750-7611 팩스 | (031)723-8800
홈페이지주소 | www.sejong.org

- * 『정세와 정책』은 세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블러틴으로 주요 국제정세와 한국의 대외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 『정세와 정책』에 개진된 의견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